범여 '제3지대 창당' 순항 할까

'親盧 배제론' 등 난제 많아 미지수

18일 대통합파 동반 탈당 파괴력 여부가 관건

우리당 탈당그룹-시민사회 로드맵 '동상이몽'

범여권 통합논의가 '제3지대 통합정당' 쪽으로 일단 방향을 잡았지만 순조롭게 진행될지는 미지수다. 정파 간 이해가 첨예하게 맞서는 '뜨거운 감자'들은 아예 건드리지 않은 채 일단 창당 프로세스부터 밀어붙이고 있는 형국이어서 '친노 배제론' 등 갑자기 돌출될 수 있는 변수에 의해 창당 흐름이 급격히 흔들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동반탈당 '파괴력'은=18일께로 예상되는 열린우리당과 통합민주당 대통합파의 동반 탈당이 어느 정도의 파괴력을 가질 지가 신당 창당의 관건이다.

우리당의 경우 15명 안팎의 탈당이 예상된다. 원내교섭단체를 꾸릴 정도는 아니지만 집단탈당의 충격 효과는 낼 수 있는 수준이다. 송영길 사무총장과 홍재형 최고위원이 당직을 사퇴하면서 탈당 의사를 굳힌 것으로 보이고 친노 중진으로 분류되는 유인태 의원도 막판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탈당의 면면으로 볼 때 일단 무게감이 느껴진다는 평가다.

통합민주당은 원내대표를 지낸 김효석 의원을 비롯한 지역구 의원 4명이 탈당을 시사한 상태다. 여기에 박준영 전남도지사와 박광태 광주시장 등 원외인사 50여명도 탈당대열에 합류할 것으로 전해졌다. 숫자 이상의 무게감이 느껴지는 탈당 세력이다. 하지만, 두 당이 동참하는 탈당이어서 규모가 예상대로 되지 않으면 그 파괴력은 반감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시민사회와의 '동상이몽'=창당 로드맵을 놓고 우리당 탈당그룹과 시민사회진영이 공동보조를 취하고 있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동상이몽'이 의외로 심하다.

우리당 탈당그룹인 대통합추진모임은 시민사회진영을 대통합의 '원 오브 뎀'(One of them)으로 보고 있는 반면 시민사회진영인 미래창조연대는 기존 정치권과 '일 대 일'로 공동창당준비위를 구성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당초 이날 오전 열릴 예정이던 '6인 회동'(대통합추진모임 1명+선진평화연대 1명+통합민주당 대통합파 1+미래창조연대 3명)이 무산된 것도 양측의 '힘겨루기'가 작용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양측 모두 비판여론을 의식할 수밖에 없는 데다 '대통합 시간표'가 촉박하다는 인식을 같이하고 있어 어떤 식으로든 절충점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친노 배제론=친노세력을 다 끌고 가느냐, 아니면 일부를 떼어놓고 가느냐는 여전히 논란거리다. 통합민주당은 친노세력이 '걸러지지' 않은 대통합 신당에 참여할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열린우리당은 친노세력까지 '남김없이' 끌고 가는 방식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신당창당을 주도하고 있는 대통합추진모임이 의도적으로 쟁점화를 피하고 있어 당장 논란이 표면화될 것으로 보이지 않지만 공동창준위가 구성되면 자연스럽게 논쟁이 불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통합민주당 대통합파를 비롯해 탈당그룹 일부도 강경 친노세력의 배제가 필요하다는 견해를 내비치고 있어 탈당그룹 내부의 치열한 노선투쟁을 촉발시킬 개연성이 있다. 이 과정에서 친노 일부 세력은 우리당을 사수하는 입장으로 돌아설 가능성도 제기된다. /연합뉴스

제59주년 제헌절을 맞아 17일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경축식에서 임채정 국회의장, 이용훈 대법원장, 이강국 헌법재판소장, 한덕수 국무총리, 고현철 중앙선관위원장, 한나라당 강재섭 대표, 열린우리당 정세균 의장(왼쪽부터) 등 참석자들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李·朴 "18대 국회서 논의" 재확인

孫·鄭 "국민 합의 거쳐야" 신중론

■ 盧 개헌 공론화 촉구…대선주자 반응

노무현 대통령과 임채정 국회의장이 17일 59회 제헌절을 계기로 개헌 논의의 공론화를 촉구하고 나서면서 대선을 앞두고 개헌 논의의 불씨가 되살아날 지 주목된다.

◇한나라 '빅2'=이명박 전 서울시장은 올해 대선에서 개헌을 공약으로 내걸고 차기 정권에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 전 시장측은 또 4년 중임제 등 권력구조 문제는 추후 공약을 성안하는 과정에서 최종 입장을 정리하겠다고 말했다.

박근혜 전 대표도 올 대선에서 개헌을 공약으로 내걸고 대통령에 당선되면 18대 국회에서 본격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다. 박 전 대표는 특히 개헌논의 과정에서 임기문제에 대해서도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박 전 대표는 정.부통령제 도입을 포함해 '4년 중임제' 개헌에 찬성하는 입장이며 단순히 권력구조만 바꾸는 원포인트 개헌 외에 자유시장 경제의 원칙을 반영하는 폭넓은 개헌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범여 주자군=범여권 주자중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는 손학규 전 지사는 권력구조 뿐 아니라 영토조항 등 개헌이 필요한 사안은 국민적 합의를 거쳐 개헌할 수 있다는 원론적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개헌논의를 앞장서서 주도하지는 않고 있다.

손 전 지사 측근은 "각 후보가 개헌안을 공약으로 내걸고 국민의 평가를 받아봐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하고 노 대통령이 내각제와 결선투표제를 제안한 데 대해 "구체적으로 검토한 뒤 입장을 밝히겠다"는 신중론을 폈다.

정동영 전 열린우리당 의장은 개헌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찬성하는 입장이지만 국민적 요구가 있어야 실질적인 진전이 가능하다며 조기 공론화에는 신중론을 견지하고 있다.

친노 주자인 이해찬 전 국무총리는 올 대선에서 각 후보가 개헌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18대 국회에서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양승조 대변인은 성명을 내고 "18대 국회에서 개헌특위를 구성해 여야간에 진지한 논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광주·전남지역 민심은 대통합 통한 정권 창출"

박광태 광주시장 인터뷰

범여권 대통합의 흐름이 '제3지대 신당 창당'으로 가닥을 잡은 가운데 박광태 광주시장이 정치권의 주목을 받고 있다. 현직 광역단체장으로는 이례적으로 범여권 대통합을 주장하면서 통합민주당 대통합파 의원들과 함께 당 지도부를 압박하며 제3지대 대통합 신당 창당에 주도적으로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16일 서울에서 광주지역 국회 출입기자들과 만난 박 시장은 "한나라당에 정권을 넘기면 국가와 지역의 미래는 암담하다"며 "광주·전남지역 민심은 대통합을 통해 정권 창출하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시장은 또한, "그동안 수차례 이 같은 의사를 민주당 지도부에 전달했으나 대통합 논의가 진전되지 않아 결국 박준영 전남지사와 함께 행동으로 나설 수 밖에 없었다"며 "박상천 대표가 조만간 현명한 결단을 내릴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치인은 어려울 때일수록 민심과 함께 정도를 가면 된다"고 강조한 박 시장은 "역사적인 결단이 필요한 시점에서 지분이나 주도권 다툼, 구원에 연연하면 안 된다"며 당 지도부에 결단을 촉구하기도 했다.

열린우리당의 해체 문제와 관련, 박 시장은 "그런 얘기를 꺼내면 범여권 대통합이 더 복잡해지고 해결되는 일도 없다"며 "그러나 열린우리당 친노 강경파는 결국 당 사수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박 시장은 "박 지사와 나의 임무는 광주·전남의 민심을 당 지도부에 전달, 통합민주당이 범여권 대통합에 나서게 하는 것일 뿐"이라며 "광역단체장이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정치 문제는 통합민주당이 민심을 따라 잘해 줬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盧대통령-5부 요인 제헌절 만찬 취소

임채정 국회의장의 초청으로 17일 저녁 개최될 예정이었던 노무현 대통령과 5부 요인 간의 만찬회동이 취소됐다.

이는 초청 대상인 이강국 헌법재판소장과 고현철 중앙선관위원장이 최근 노 대통령이 선거법상 중립의무와 관련해 헌법소원을 제기한 데 따른 민감한 상황을 의식해 불참 의사를 통보해왔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관계자는 "헌재소장과 중앙선관위원장이 사정을 이유로 오늘 회동에 참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통보해와 이를 취소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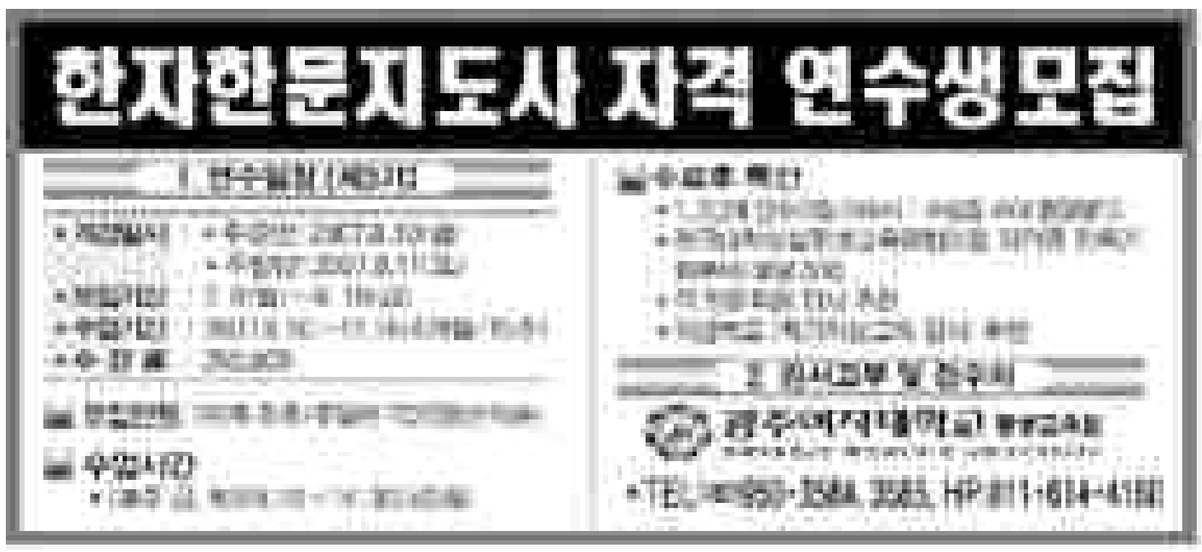
청와대 천호선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헌재소장과 선관위원장이 헌법소원과 관련된 당사자이고 주무 기관이기도 하기 때문에 참석을 부담스러워 했다는 후문"이라며 "국회의장이 종합적으로 판단해 대통령을 모시는 것이 결례가 될 것 같다며 참석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건의했고 이를 수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대통합때 기득권 연연하는 세력 퇴출"

광주서 '민주세력 대통합 투어' 추미애 전 의원

범여권 대선 예비주자들의 움직임이 점차 분주해지고 있는 가운데 추미애 전 의원이 대선 출마 선언을 앞두고 17일 광주를 기점으로 '민주세력 대통합 투어'에 나서 정치권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지난 17대 총선을 일주일 앞두고 광주를 방문, 구 전남도청부터 5·18 국립묘지까지 3박4일 동안 '3보(步)1배(拜)'라는 탄핵의 십자가를 졌던 추 전 의원이 광주를 중심으로 한 호남의 지지를 이끌어 낸다면 범여권 대선 구도에 상당한 변화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추 전 의원은 최근 전국 통합민주당 시·도당을 잇따라 방문한 데 이어 광주부터 시작하는 '민주세력 대통합 투어'를 통해 대선 주자로서 본격적인 활동에 나서는 모습이다. 추 전 의원의 민주세력 대통합 투어는 17일 오후 5시 광주 양동시장에서 시작됐다.

기자와 만난 추 전 의원은 범여권 대통합과 관련, "일부 정치 세력이 진솔한 반성보다는 범여권 대통합의 명분 뒤에 숨어 무임 승차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아쉽다"며 "특히, 범여권 대통합 과정에서 기득권에 연연하는 정치 세력은 국민의 심판을 받아 결국 정치권에서 퇴출당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동욱기자 tuim@